

2024-1-02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람드리홀

주최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 순서

구분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li><li>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li><li>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li><li>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li><li>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li></ol>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퍼포먼스	참가자 퍼포먼스



# 목 차

-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 3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21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37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 63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 97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1. 22대 총선과 후보자 공천

### 1) 공천자의 성별 구성

#### ① 지역구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3일 20시 현재 전국 254개 지역구에 최종 69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sup>1)</sup>,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46명, 국민의힘 254명,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 28명,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1명, 진보당 21명 등이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중 여성은 99명(14.16%)이며 남성은 600명(85.84%)으로 남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우리 법에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공천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15명(45.06%)으로 가장 많고, 60대 247명(35.34%), 40대 73명(10.44%), 70대 26명(3.72%)으로 50~60대가 80%를 넘는다. 청년층은 20대 4명, 30대 34명으로 38명(5.44%)에 그치고 있다. 출신 직업별로는 국회의원 173명(24.75%), 정치인 266명(38.05%), 변호사 57명(8.15%), 교육자 39명(5.58%) 등으로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60% 이상을 차지한다.<sup>2)</sup>

이같은 지역구 공천자의 구성을 종합하면, '남성-50대 이상-정치인과 법조계 출신'이 주류를 이루며, '여성-청년층-다양한 직업군'이 소수이자 배제된 대표적인

---

1) 이 글에서 각 정당의 표기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당 중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표기 순서를 따랐다.

2) 후보자의 직업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의 직업은 알 수 없으므로 해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비례대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 정당은 38개 곳으로, 총 253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미래 35명, 녹색정의당 14명, 새로운미래 11명, 개혁신당 10명, 자유통일당 20명, 조국혁신당 25명 등이다.

이중 여성은 총 13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미래 18명, 녹색정의당 8명, 새로운미래 6명, 개혁신당 5명, 자유통일당 10명, 조국혁신당 13명 등이다. 여성이 54.94%로 과반수이며, 2030 청년은 33명으로 13.04%를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90명(19.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자 30명(11.86%), 변호사 19명(7.51%)이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비례대표 공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이나 직업별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 면에서는 5060 집단이 61.66%를 차지해 여전히 청년층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 2) 여성 후보자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후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1명(16.67%), 국민의힘 30명(11.81%), 녹색정의당 7명(41.18%), 새로운미래 3명(10.71%), 개혁신당 6명(13.95%), 자유통일당 3명(27.27%), 진보당 5명(23.80%) 등이다.

여성 후보자의 연령대는 50대 45명(45.45%), 60대 21명(21.21%), 40대 21명(21.21%), 30대 9명(9.09%), 20대 2명(2.02%), 70대 1명(1.01%)으로 50대가 가장 많고 40대와 60대가 같은 비중이며, 2030 청년층은 11.11%에 불과하다. 이를 남성 후보자의 연령과 비교해 볼 때 청년층이 2배 정도 더 많고 60~70대가 더 적다.<sup>3)</sup> 여성 후보자의 연령층이 훨씬 더 젊은 것을 알 수 있다.

---

3) 남성 후보자의 연령층은 20대 2명(0.33%), 30대 25명(4.17%), 40대 52명(8.67%), 50대 270



여성 후보자의 직업은 국회의원 26명(26.26%), 정치인 42명(42.42%), 변호사 8명(8.08%), 약사·의사 3명(3.03%), 교육자 2명(2.02%), 상업·회사원·종교인 각 1명(1.01%)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그 밖의 직업군(농·축산업, 운수업, 수산업, 회사원, 정보통신업, 무직 등)에서도 공천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2대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비율은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19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비율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은 63명(6.98%)이며, 20대 총선에서 여성은 98명(10.49%), 21대 총선에서 여성은 209명(18.98%)을 기록했다. 이 중 21대 총선의 경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77명(전체 23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원내 정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 중 여성 몫은 소폭이지만 상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 공천이라는 법제와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비추어 볼 때, 14%에 불과한 현재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에 한정해 살펴보면, 19대부터 22대까지 보수 정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의 수는 19대 16명(6.96%), 20대 16명(6.45%), 21대 26명(11.02%), 22대 30명(11.81%)으로 나타난다. 여성 공천자의 비중이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1대에 상승했으나 22대에는 정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보 정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21명(10.04%), 20대 25명(10.68%), 21대 32명(12.65%), 22대 41명(16.67%)으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4-5% 정도 높은 비율이지만, 현재의 수치가 진보 정당의 정체성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自問)과 반성이 필요한 수준이다.

### 3) 공천의 질적 평가

22대 총선의 공천 과정 역시 수많은 파행과 소동, 잡음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는

---

명(45%), 60대 226명(37.67%), 70대 25명(4.17%)으로 나타난다.

불신과 혐오, 불안을 가중시켰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는 시종일관 ‘윤-한 갈등’,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졌고, ‘김건희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 속에서 세대 교체나 성별 균형, 다양한 집단의 대표성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현실적 부담 앞에서 방탄 공천이라는 집중포화를 맞으며 전개되었다. 그런 점에서 거대 양당은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22대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려는 이면적(裏面的) 목적에 따라 ‘방탄 공천’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젠더 관점에서 볼 때 ‘방탄 공천’은 2024년 22대 국회에 주어진 사명과 책임, 그것을 인식하고 추진해 가야 할 의원들의 역량이나 의지, 문제의식의 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퇴행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 조직과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고 민주적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수많은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이런 반민주적 퇴행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국가정책의 방향키를 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권지원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은 핵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6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여성들의 거부감은 성평등 정책의 회복 없이는 바뀔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청년들을 갈라치기 했던 정치적 전략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 역시 당연히 ‘여성을 억누르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여성 후보자의 낮은 비율보다

---

4) 경향신문, “총선 앞두고 여가부 또 흔드는 정부…직원들은 ‘불안’”, 2024년 2월 22일자.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성 의제, 성평등 의제를 국회에서 제기하고 설득하고 입법화해 나갈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명도 되지 않는 여성 후보자 중에서 성평등 정치를 구현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갈 책임을 자신의 주요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인물들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정치의 구현자, 즉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차별과 혐오의 청산을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으리라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현재로서 극히 소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를 표방하는 인물이 없으며, 과거 여성폭력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자(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성계의 신뢰를 잃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표방해 왔지만, 정책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운동을 적대시할 것인지 그리고도 남은 3년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입법을 주도해 갔던 정춘숙과 권인숙이 모두 탈락했다. 그 외에 성평등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던 청년 정치인 박성민(용인정)과 권지웅(서대문갑)도 낙득하기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며 탈락했다.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권지웅. 이 네 후보의 탈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소란과 부조리는 민주당의 정치사에서 깊은 상흔으로 남을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찌 됐든 민주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후보의 적은 숫자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개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여당-영남, 야당-호남의 지역 구도 속에서 소위 혐지 공천자 중 여성이 많은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30%까지는 못 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거대 양당에게 특별히 물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5)</sup>

---

5) 동아일보, “청년-여성 배려한다더니...국힘-민주, 5060 남성으로 채웠다”, 2024년 3월 19일자.

셋째, 성폭력 가해자나 위력 성폭력 2차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까지 해왔던 인물들이 공천 선상에 올랐던 사건들도 반드시 복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젠더폭력과 관련된 의혹을 지닌 인물들이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류 중년 남성들이 장악한 국회와 정당의 얼굴이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의 헤게모니(지배력) 구도를 전복시켜야 한다.

## 2. 각 정당의 공약

### 1) 분석틀과 기본 질문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후보를 낸 정당들(위성 정당 포함)의 공약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위상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첫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당이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대의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자신의 책무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둘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낮은 단계 또는 후 순위이거나 세부적인 사업 수준에서 설정될 경우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여성·성평등 정책 의제는 불균형한 젠더관계를 바로잡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책들로서 수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기본 의제 10가지

각 정당의 공약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석틀(framework)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제시한

“2024 총선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2024. 3. 19.)” 중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 정책과제와 몇 가지 관련 정책 제안 서들을 토대로 10개의 기본 의제를 설정했다.<sup>6)</sup>

- ①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 및 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②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④ 젠더폭력 입법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⑥ 돌봄서비스 체계 개선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⑦ 일과 돌봄의 균형 확대와 남성의 돌봄 참여 제도 현실화
- ⑧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 ⑨ 가족 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 ⑩ 성평등 교육 확대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 확산

### 3) 정당 공약 분석<sup>7)</sup>

#### ①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 비전과 국가시스템 개편 없는 여성·돌봄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은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건강과 행복, 안전, 소상공인 지원, 평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10개의 의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자원조달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성평등 정책은 10가지 의제 영역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하위 목표와 이행방법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

6) 이 의제들을 선정하는 데는 2030 유권자들 대상 조사, 성평등 관련 정책 토론회 자료들을 활용했다. 비영리 정치스타트업 ‘뉴웨이즈’가 주관한 역공약 캠페인은 20·30 유권자 1000명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8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역공약집’을 만들고, 각 지역구 후보에게 청년들이 역으로 제시한 공약들을 지킬 것인지 응답을 요구하는 운동이다(“청년·미래 이슈에 응답하라...유권자 운동 펼치는 MZ들”, 세계일보, 2024. 3. 18.). 또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24. 3. 18.) 자료 등을 참고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당별 정책 공약(2024. 3. 23. 기준)을 분석했다. 단, 자유통합당의 경우 전체 의제 설정에서 반여성적·반소수자·반인권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살펴볼 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관행 근절과 처벌규정 강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결혼·출산 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출산과 육아 관련 휴직 및 급여 보장 확대, 지자체 협력형 운동내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산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데이트폭력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별도의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 관점의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목표와 정책 수준에서 그동안 여성계에서 제시해 온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나 차별금지법,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균형한 젠더관계를 전환해 가는 데 필요한 비전과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 ② 국민의힘 : 여성·성평등정책을 대체한 저출생 대책

국민의힘도 10개 영역에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목표와 이행방법, 기간,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가족, 돌봄·양육, 소상공인, 중소기업, 안전, 지역균형, 교통, 청년, 노인, 기후위기의 의제 영역이다. 하위목표에서는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출생 대책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 학교 확충,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가 주목할 만하지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에서 주도할 경우 성평등 지향성은 소실되고 가족중심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지원에서 민간 지원으로 이행하는 것은 자칫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시민 안전 영역에서는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뿐 스토킹·

가정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sup>8)</sup> 젠더폭력이 개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불균형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임을 도외시한 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청년 세대의 반감과 왜곡된 젠더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③ 더불어민주연합 : 성평등 명시 없는 인구·돌봄 정책

10개의 의제 영역으로, 민생입법, 정치개혁, 출산과 육아의 국가 책임, 안전, 소상공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 농산어촌,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해서는 출산과 육아의 국가 책임 영역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남녀 생식 건강 지원,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명확한 성평등 가치나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지 않고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의 권리 영역 중 고용·승진에서 성별 차별 금지 방안 마련과 성별 임금 차별 완화를 위한 공시제 제도화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보다는 저출생 대책으로서 인구와 돌봄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별 임금격차 완화 정도가 다뤄지고 있다.

### ④ 국민의미래 : 위기여성 지원에 한정된 정책

국민의미래는 교육·돌봄,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족과 폭력·범죄 피해자, 군 장병, 제복 공무원, 중소기업, 기후위기의 10개 영역에서 의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대상별 정책을 제안한 가운데, 여성·성평등 정책은 명시되지 않고 관련 분야로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와 복지급여 인상, 위기임산부 지원,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 대신 저출생 대책으로서 한부모와 위기임신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8)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이 전부다.

〈 표1 〉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제시 및 위상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 연합	국민의 미래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 신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여성·성평등정책 공약 제시 여부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여성·성평등정책 공약 위상	낮음	없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 표2 〉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내용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 연합	국민의 미래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 신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①여성가족부 강화					○	○			
②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				
③차별금지법					○				○
④젠더폭력 대응 강화	○			○	○	○		○	○
⑤성별임금격차 해소	○		○		○	○		○	○
⑥돌봄서비스체계 개선	○				○	○		○	○
⑦일·돌봄 균형	○	△	○		○	○	○	○	○
⑧재생산권 보장					○				
⑨가족다양성	○			○	○	○	○		○
⑩성평등교육 확대					○				

⑤ **녹색정의당** :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 기후, 저출생, 돌봄, 노동, 성평등, 지역소멸·민생,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 생태·농업·먹거리, 주거, 개헌·사법·언론·남북·외교의 10개 영역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목표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의제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것은 물론, 저출생, 돌봄, 노동과 소수자 인권에서 모두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을 충실하게 통합하고 있다. 성평등 영역에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라는 의제 아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성평등 돌봄과 일·생활 균형,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건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한부모가족, 이주여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영역에서는 임신·출생 사회책임제, 자동육아휴직제, 노동시간 단축, 아동돌봄 국가책임, 돌봄 영역에서는 생애통합 돌봄복지국가를 의제로 두고 읍면동 수준의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노동 영역에서도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녹색정의당은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의 10개 항목에서 모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10개 의제 영역 전반의 정책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산 부분에서 정교한 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⑥ 새로운미래 :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돌봄 정책

정치·사법·언론 개혁, 경제·금융, 노동, 과학·기술·미래 먹거리, 생명 안전, 기후 위기, 포용 복지·포용 돌봄, 미래·저출생·청년, 인구소멸·균형발전, 외교·국방의 10개 영역에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제안은 중소기업·여성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돌봄청 신설,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생활동반자법,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이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돌봄청을 신설하며 직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명확히 성평등 가치를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남성징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목표 제시를 넘어선 구체적인 과제는 나타나 있지 않아 앞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⑦ 개혁신당 : 성평등보다 젠더 갈라치기 위험을 내포한 정책

과학기술, 사법 개혁, 경제, 복지 개혁, 병역제도 개혁, 교육 개혁, 언론규제 개혁,

국가균형 발전, 교통, 에너지의 10개 영역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나 성인지적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 대상) 도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발표 당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는 불필요하게 젠더 갈라치기를 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다.

### ⑧ 조국혁신당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의제화에 기초한 포괄적 정책

검찰 개혁, 헌법 개정, 기후위기, 저출생·성평등·돌봄, 교육 혁신, 과학기술, 국가균형 발전, 민생경제, 기획재정부 개혁, 남북관계의 10개 영역에서 의제와 목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여성·성평등 정책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 의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졌다. 정책 목표로는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전국민 통합돌봄 등을 제시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생 대응 예산 도입, 국공립 보육·교육 서비스 확대, 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대책,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등이다. 그밖에 국가돌봄청 신설과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여성·청년·노인·장애인의 고용 안정 강화도 제시되고 있다.

여성·성평등 정책을 10대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위상을 높였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⑨ 진보당 :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광범위한 입법과 제도 도입 정책

검찰개혁, 가계부채, 부자증세, 기후 에너지, 노후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주택, 평등·안전, 일과 삶의 균형, 지역경제 활성화의 10개 영역에서 의제와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성평등 정책은 주로 돌봄국가책임제, 평등·안전 의제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공공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성평등노동기본법 제정,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평등법·생활동반자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교육 강화, 양육크레딧·돌봄크레딧 시행 등이 있다.

정책의 전 영역에서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다각화하고 있다.

#### 4) 전반적 평가

2024년 3월 23일 현재 원내 10개 정당 중 자유통일당을 제외한 9개 정당의 공약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의제 설정 수준에 이를 포함한 정당은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세 정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로운미래는 목표나 세부 정책 수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성평등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은 극소수의 여성정책을 제시했다.

둘째, 공약 내용에서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여성가족부 유지·강화’를 공식화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재생산권 보장, 성평등 교육 확대 정책은 녹색정의당만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돌봄서비스체계 개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젠더폭력 대응강화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연합,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제시하고 있으며, 일과 돌봄의 균형정책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포함하고 있다. 가족다양성 정책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셋째, 거대 양당의 정책이 갖는 문제점이다.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한 정당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영역이 여성·성평등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복을 위해 가장 깊게 고민해야 할 지점 중 하나가 이 분야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 신생 정당의 정책적 관심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거대 양당의 정책 수준은 상대적으로 걱정스러운 수준이

다. 국민의힘은 아예 여성·성평등 정책을 배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강화 같은 기본적인 입장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없이 남성의 돌봄 참여가 얼마나 가능할지(국민의힘) 의문이며, 성평등 비전 없이 핀셋정책의 수행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더불어민주당)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제시 이전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실종된 사회적 가치와 방향성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3. 백래시 시대,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정치의 방향

#### 1) ‘젠더갈등’의 진단과 해법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등장한 젠더 갈라치기는 청년세대 남녀의 ‘젠더갈등’으로 명명되면서 이익 집단의 제로섬 게임처럼 묘사되어 왔다. 일터와 가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당연한 요구이지만 정치권은 상황을 ‘젠더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묵살되고 남성징병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청년 남성들의 분노도 누적되어 왔다. 혐오정치가 정치권을 휩쓸고 여성혐오에 편승한 차별과 폭력도 계속되었다.

“‘젠더갈등’ 담론은 ‘여성혐오’라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페미니즘 백래시의 산물”이지만, “청년 표심 얻기의 정치적 도구(‘이대남’ 언설)로 활용되고, 담론 차원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와해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성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돌봄, 노동, 폭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성평등은 성별은 물론, 연령·계층·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성평등 정책의 후퇴는 젠더를 넘어 다양한 시민들의 시민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한다.<sup>10)</sup>

9) 추지현(2024), “‘젠더갈등’ 프레임의 한계와 성평등 정치의 방향”,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자료집.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규범적 자원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젠더 전환(gender transformation), 즉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해체하고 수평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려는 성평등 운동과 정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청년 세대 내 젠더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은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젠더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sup>12)</sup> 젠더폭력 역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의 구도 속에서 젠더폭력의 대응은 ‘젠더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 불평등한 구조에 기초해 구성된 문화와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폭력의 발생과 유지, 재생산의 고리를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젠더 간의 대립이 아니라 젠더의 차별적 구조를 문제제기하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sup>14)</sup> 정치권은 이제껏 움직여 왔던 방식, 즉 여성의 요구에 침묵하고 남성의 분노에 편승하는 반(反)민주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젠더관계의 전환이라는 점을 깨닫고 차별과 혐오,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무도·무능·권위주의 사회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국민들

---

10) 추지현, 앞의 글.

11) 신경아(2024), “청년 고용불안정 시대, 성평등 노동정책의 과제”,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12) 이은아(2024), “청년 세대 친밀성의 변화: ‘가족’을 넘어서는 돌봄 정책”,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13) 장다혜(2024), “젠더폭력, 안전/보호 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14) 마경희(2024), “성평등 정치(정책)의 선진화를 제안함”,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간청하는 만큼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성에게 투표하라고 매달리는 만큼 정치는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회가 민주주의국가의 상징인 만큼, 국회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 왔나?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성(自省)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평등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들

무엇이 두려운가? 여성의 표는 필요하지만 여성정책은 말할 수 없다는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여성’ ‘성평등’이란 단어는 청년 남성들의 표를 날려버리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인가? 그러나 혐오에 기반한 정치가 설 곳 또한 넓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이 외면한 여성·성평등 정책을 소규모·신생 정당들이 안고 가는 모습과 여기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책의 비전과 지향에서 ‘성평등’을 삭제하고 성주류화를 외면하며 가치와 지향 없는 정책의 파편들을 나열해 갈 때, 여성들은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여성들은 여성정책에 그리고 성평등정책에 투표할 것이다. 여성과 함께 할 때만 사회가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남성들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염원을 담은 아래의 목소리들을 되새기며 글을 맺는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주변화하거나 삭제하는 정치, 여성의 요구를 갈등으로 치부하는 정치, 여성을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하다.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적 자본주의·군사주의,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선언문 )

## 주권자의 목소리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홈페이지 게시글)

“여성혐오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싫어집니다.”

“야당이 무엇보다 각성할 때, 정신 차리고 여성 공천 늘리길”

“모든 것이 퇴화하는 상황에서...정치의 존재, 국회가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지 후보자들은 늘 기억하고 고민하라”

“그 어느 때보다 퇴화한 국회, 성평등한 정책과 최소한 국회의원 성별이 균등해지고 나이가 다양해지는 그날까지 관심을 잃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 그리고 성차별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인, 페미니즘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에게 표 줄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시민권을!”

“퇴행하는 시대에 버티는 것도 힘들다.”

“성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정치하려는 인간들은 무조건 퇴출시킵시다.”



출처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22대 총선 정책공약 기초

**‘성평등 실현’ 목표 실종, 여성정책은 저출산·안전 대책의 하위로 편제 경향**

-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은 정책 비전과는 동떨어진, 득표율에 유리한 정치공학적인 방식으로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돋보이고 있음. 또한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 키워드는 이전 선거에 비해서도 놀랍도록 찾아보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들이 게시한 10대 공약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특히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등치되었거나, 보건복지 혹은 안전 영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표 1〉 참고).
- 지난 몇 년간 젠더 의제와 여성운동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한 주요 동력이 되어 왔음.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그에 관한 여성운동의 대응, 디지털 성폭력,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여성주의 조직화와 일부 청년 남성들의 반동적 움직임이 그 예임. 그 이후 윤석열 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안티페미니즘 정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음.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한 수많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뒤따른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은 국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치권은 이러한 성평등·민주주의 퇴행을 되돌리고 한국사회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응답과 약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함.
-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경우는 ‘성평등 실현’ 키워드를 정책 목표에서 찾아볼 수 없음. 〈여성〉 분야로 분류된 정책공약 내용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성평등 실현’을 상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도구화되거나, 젠더 관점이 부족한 채 시민 안전 정책의 하위 카테고리로 편제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한 예로, [여성] 공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목표는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임. 이미 상식적으로도 여성폭력 범죄라고 알려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흉악범죄’, ‘사이버범죄’ 등으로 통칭함으로써 관련 범죄가 지니는 젠더 측면을 애써 지우려는 시도가 보임<sup>15)</sup>. 한편,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는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

〈표 1〉 총선 여성 관련 공약 목표 표제어 정당별 비교

정당	내용
개혁신당	○ [보건복지·청년·여성] 낯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국민의미래	○ [보건복지/여성/사법윤리/안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의힘	○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녹색정의당	○ [보건복지, 교육, 여성, 노동]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여성]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
더불어민주당	○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경제재정, 보건복지, 교육, 여성, 농림해양수산]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 없음
새로운미래	○ [노동/보건복지/여성] 노동 ○ [보건복지/여성] 포용 복지·포용·돌봄
자유통일당	○ 없음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15)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등, ②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시가반 및 초형 CCTV 확대 설치

-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성평등·여성정책 키워드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성평등·여성 공약 표제어와 목표를 살펴보았음 (〈표 2〉 참고).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21대 총선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하여 노동, 건강, 폭력, 복지 등의 영역에서 여성인권보장 정책을 내놓았음.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 돌봄, 젠더폭력 등의 상세한 입법과제를 내놓았음. 한편,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독자적 목표 없이 ‘저출생 극복’과 ‘시민 안전’ 등의 세부 목표 아래 노동, 돌봄, 여성폭력 등 각각의 여성정책 과제가 산발적으로 편재되어 있음. 정책 공약의 목표와 표제어만 보더라도 2년 전 선거에 비해 ‘여성’, ‘인권’, ‘성평등’이라는 키워드와 목표가 축소된 경향을 볼 수 있음.
- 국민의힘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여성범죄를 안전정책의 하위로 분류하였으며,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의 여성범죄에 대한 정책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심각한 퇴행 후, 3개월 후 진행된 2022년 8대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관련 어떠한 정책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음.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는 저출산 관련 공약과 여성범죄를 ‘흉악범죄’로 치환한 안전 관련 정책을 여성 관련 카테고리 분류하였음.

〈표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성평등/여성 공약 표제어와 목표 정책 변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2대 총선 (2024.4)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저출생 문제 해결 - 목표 :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 목표 :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국민 안전을 최우선 - 목표 (관련내용 발췌): 범죄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목표 :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강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	
8대 지선 (2022.6)	[노동, 여성, 교육, 기재]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목표 : 청년 희망, 성평등 사회 구축	[여성] 관련 카테고리 없음.
20대 대선 (2022.3)	[경제, 여성, 청년]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목표 :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	[여성] 관련 카테고리 없음. [사법·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 목표 (관련내용 발췌):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
21대 총선 (2020.4) 16)	[청년, 여성]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건설 - 목표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여성]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 목표 (관련내용 발췌) :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전통적 가족 규범 강화와 젠더 관점 없는 현금지원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응 반복

-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은 '저출산'을 한국 사회 핵심 사회문제이자 심각한 위기로 삼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많은 정당에서 저출산 문제 대응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 한국사회 근본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청년을 전통적 이성에 가족 규범의 굴레로 포함하고 현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효한 요인이라는 판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sup>16)</sup>.
- 현재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경제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한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통계로 나타나 있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생각 격차도 매우 큼. 이성애-가부장제 중심 전통적 가족 규범과 친밀성에 대한

16) <국민의힘>의 당명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이었음.

17) 한 예로,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는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이며, 세부내용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경제적 지원 정책 등임.

인식 변화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지체된 전통적 가족제도와 규범, 젠더불평등, 불평등한 가사·양육 부담, 경력단절 문제,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 자녀교육, 경제사회 계층의 세대 대물림,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암묵적’ 저항의 측면이 높음<sup>18)</sup>. 즉, 저출산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임. 여야를 막론한 젠더 관점 없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공약들이 도리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존재 이유를 반증하고 있는 셈임. 즉, 즉 저출산이라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하여 주요 정당들의 핵심 의제이자 목표로 들어가 있는 형국임.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특히,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설부처 명칭은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구의 관리·통제 측면에서 성·생식보건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의 퇴행을 부처 명칭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음.

## 2.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전담부처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대선 시기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을 ‘청년 공약’으로 선포했던 대통령 답게, 현 정부 취임 후 2년 동안 성평등·여성 정책은 급속도로 퇴행을 거듭하였음. 성평등 정책의 급속한 축소와 퇴행, 여기부 본연의 사업 운영 미비, 지자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위상 격하와 성평등 정책 연구기능이 축소·약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면 삭감 등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강화 등을 포함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는 22대 국회에서 정당들이 핵심적으로 다룸으로써, 여성유권자들에게 응답해야 함.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회원단체, 연대단체들은 한국사회 뿌리깊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100여 개의 총선 젠더정책과제를 지난 2023년 9월 발표하였음. 그 중 핵심과제로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전담하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

18) 이은아(2024), “청년 세대 친밀성의 변화 : ‘가족’을 넘어서 ‘돌봄 정책’,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24-03-18, 신현영 의원실 주최

진체계 강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음.

**<표 3>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요구안 -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
  - 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젠더·일·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봄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집행력 강화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
  - 정부부처 및 사·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 성평등 정책의 민관 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각 정당 공약 분석 : 저출산 대응 목표 아래 묻힌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10개 원내정당의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공약을 <표 4>과 같이 살펴보았음.
- 성평등정책전담부처 강화와 관련한 공약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개 정당만이 제시하였음. 녹색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고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헌법에 남녀동등권 명문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지자체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기능 강화, 성별영향평가 업무 전담인력 확보 및 각 부처/기관에 성평등 담당관 채용 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 돋보임. 새로운미래 또한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개혁신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관련 공약이 전무하며, 정당 전체 공약 중에서도 여성 관련 내용은 일하는 출산 여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이준

석 현 개혁신당 대표는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일부 청년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 정서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젠더갈라치기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한국 사회 성평등 정책과 청년 정치의 발전에 심각한 해로운 영향을 미친 인물임. 공당의 공약 전체에서조차 여성이 거의 전면 삭제되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하는 개혁신당이 여성유권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냄.

- 국민의힘 또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공약이 전무하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내놓았음. 세부 내용으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그동안 여성운동진영에서 여러 부처에 파편화된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라는 요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공약임.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 재생산 권리 의제를 인구학적 측면의 성·생식보건의 문제로 환원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관리·통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목표 아래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여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을 한다는 공약이 제시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공약이 부재하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임.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내세운 저출생 대책 공약은 다른 주요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젠더 관점이 부재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출산율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직접지원 정책 등이 주를 이룸.
- 자유통일당은 성평등 관련 추진체계를 아예 폐기하거나 전면 퇴행시키는 정책 공약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함. 심지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정책과 '성별영향평가'를 '출산 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정책으로 바꾸어 실시하지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공약으로 담김.
- 조국혁신당의 경우 저출산 대응 계획과 이행방안은 매우 상세히 제시함에 비해, 성평등 실현의 목표와 정책 이행방안은 부족함.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관련 정책협력망·예산 도입 등 저출생 대응 추진체계 강화와 예산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에 반해,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 혹은 성평등추진체계 정비 관련 이행계획은 없음.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 육아친화사회 등의 여성 관련 공약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 공약이 저출산 대응 목표(보건복지)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방식의 한계가 있음.
- 진보당의 경우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관련 내용은 없으나, 인권·평등권 보호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성평등노동기본법,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의 개별 법령 제·개정을 비교적 상

세하게 담고 있는 점이 돋보임.

〈표 4〉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관련 공약

정당	내용
개혁신당	없음
국민의미래	없음
국민의힘	없음 (비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녹색정의당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정부 지자체의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 평가 업무 전담 인력 확보 및 모든 부처 및 기관에 성평등 담당관 채용
더불어민주당	없음
더불어민주연합	없음 (비고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새로운미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자유통일당 <sup>19)</sup>	없음
조국혁신당	없음 (비고 :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진보당	없음

19) 이미 법/제도에 존재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자 하는 목표의 공약들을 내놓았음. (예)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



### 3. 모두의 평등한 시민적 삶을 위한 정책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발표한 총선정책과제에서 <모두의 평등한 시민적 삶> 영역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의 정책과제가 필요함을 발표하였음.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도입, 한부모여성·결혼이주여성·장애여성·여성농민 등의 권리, 정치·공적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등을 담고 있음.

〈표 5〉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요구안 -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sup>20)</sup>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지원 확대
-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 여성정치대표성 확대<sup>21)</sup>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 〈표 6〉과 〈표 7〉에 담긴 각 정당들의 공약 분석표를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소멸의 위기를 부르짖으며 출산율을 시급히 올리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한국사회의 현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리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음을 알

20)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등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 민법 제836조의2 2항(이혼숙려제) 삭제 / 「민법」 제781조 제1항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21)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기탁금 비용 축소,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계산 방식 개혁

수 있음.

- 차별금지법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만이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4개나 발의되었음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껴야 하나 이번 공약으로 답하지 않았음. 국제인권조약에서 이미 수차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관련 논의가 21대 남은 국회 임기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와 관련하여,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생활동반자법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음. 특히, 녹색정의당은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및 가족에 대한 위계와 차별을 내포하는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임.
- 한국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정책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녹색정의당이 유일하게 이주여성의 체류권, 노동권, 폭력예방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내놓았음. 새로운미래는 이주민권리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 산하 이민청 설립을 공약하였는데, 이주민 권리 보호에 관한 구체적 대안과 이주여성 특화 정책은 보이지 않는 점이 한계임.
- 장애여성권리 보장 정책의 경우, 녹색정의당이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과 의료체계확립에 관한 세부 정책을 공약한 점이 인상적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장애인관련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장애여성에 초점을 맞춘 세부정책은 보이지 않음. 농민여성권리보장 법제도 및 북한이탈여성 정책 공약 또한 전무함. 국민의미래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및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정책이 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으로 상세히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의미래의 공약에서 성평등 정책 비전이 전무하고, 여성정책 공약 또한 한부모 가정 육아와 위기임산부 등 복지/지원정책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정책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경험과 폭력, 차별을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양육비대지급제는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내놓았음. 양육비대지급제는 이미 여러차례 각종 선거 공약으로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았던 공약이며,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의제이자, 이미 21대 국회에도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예산확보 등의 현실적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내놓는 선언성 공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계획 등의 세부추진 방안과 정치적 의지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여성정치대표성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구 30% 여성공천 노력조항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이 조항이 지켜진 사례가 없으며, 이번에도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불과함. 그러나 녹색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포함한 선저게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은 전무하였음.

〈표 6〉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을 위한 관련 공약 (1)

정당	정책 내용				
	양평법 전면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공동체 권리 보장	이주여성 권리 보장	장애여성 권리보장	여성농민 권리보장
개혁신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미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녹색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 관계 제도화</li> <li>-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조약 권고 수용</li> <li>-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li> <li>-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취업 교육 지원 강화</li> <li>-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 체계 확립</li> </ul>	
더불어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고: 조속한'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 개선)	없음
더불어민주연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b>새로운미래</b>	없음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제도 도입	없음 (비고: 이주민 권리 보호: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 설립 추진, 이주 아동 양육수당 지원)	없음 (장애인 복지 강화: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 연령별·유형별 복지 확대, 이 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	없음 (비고: 농업·농업인을 위한 지원)
<b>자유통합당</b>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없음	없음		
<b>조국혁신당</b>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b>진보당</b>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없음		

〈표 7〉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을 위한 관련 공약 (2)

정당	정책 내용				
	북한이탈여성 지원 확대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원칙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sup>22)</sup>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개혁신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한부모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 - 비양육자의 각종 수입원 등을 파악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 선진화
국민의미래	없음 (비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없음	없음	없음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법적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신상공개 추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국민의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녹색정의당	없음	없음	-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양육비 이행 강제 강화, 대지급제 개선

더불어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연합	없음	없음	없음	- 사표방지외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공직선거법 개정	없음
새로운미래	없음	없음	없음	-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 비율까지 확대 -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편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없음
자유통일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국혁신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고: 헌법개정-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없음
진보당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2)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기탁금 비용 축소,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계산 방식 개혁





##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 1. 각 당의 정책 기조 평가

총선을 기해서 내는 당의 정책은 그 당의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과 방향성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당의 철학이 응축된 집약체이다. 더욱이 축약된 10대 정책과제는 한정된 지면과 수량으로 당이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말해준다. 노동과 성평등 노동 분야에서 각 당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출산과 육아 지원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기간 및 대상 확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당들은 이 정책을 저출생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분명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허나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은 부족하다. 과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결이 없다. 물론 노동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 일자리,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제안이 있기는 하나 각각의 정책 간 유기적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다. 분량에서 보듯 성평등 노동 관련 정책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은 부족하다.

#### (1) 성평등 노동, 정책 없음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자유통일당·국민의미래, 퇴행의 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이 제출한 공약집에는 노동과 성평등 노동 정책이 없다. 국민의힘 공약은 출산·육아 지원과 돌봄, 청년 인턴 대책이 전부다. 국민의미래는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이 노동정책의 전부이며 자유통일당은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가 유일한 노동공약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무관심하다’, 혹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일까. 국민의힘인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노동 관련 개악 - 더 긴 노동시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 노조 길들이기 등 -을 보면 국민의힘은 분명 명확한 의사와 의견을 갖고 있다. 성평등 정책도 후퇴 일변도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모든 정책과 기구에서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 등. 국민의힘은 노동과 성평등 분야에서 극단적인 퇴행과 후퇴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현대 정책 공약에 노동과 성평등 관련 공약이 일언반구도 없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속내를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굳이 정책화하여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었는지 궁금해진다. 개혁신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 개악과 여성공무원 병역 의무화라는 시대 역행 공약을 내놓았다.

## **(2) 성평등 노동 성과없는 21대 국회, 공약 재탕의 더불어민주당·선언만 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 노동 정책은 지난 대선에서의 주4.5일제가 ‘주4일(주4.5일)’로 변화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전 선거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확보 등은 지난 총선 공약과 같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과제들 중 성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과 같이 성평등 노동 공약 전체가 구체적 내용이 없이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이다.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이 무엇인지, 경력단절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 내용이 없는 공약은 그야말로 빈 약속(空約)일뿐이다.

## **(3)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내용, 새로운미래·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부족하나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노동시간 단축 혹은 보편적 휴식권 보장과 노동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노동 공약은 부실한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새로운미래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와 성차별 없는 노동사회 구현이라는 선언적 공약이 있을 뿐 구체화된 내용은 부재하다. 성평등 노동 분야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제안된 것은 생활동반자법 뿐이다.

#### (4)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노동 ▲성평등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4개 부문에 걸쳐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법에서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노동시장 격차해소, 노동 시간 단축, 최저임금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성평등 노동 관련한 정책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포함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차별금지법, 성차별적 괴롭힘, 직장 내 성폭력, 돌봄 등에 관해 필요한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성평등·돌봄사회 실현이라는 두 부문에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성별임금평등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은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등 4개 부문에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진보당은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유일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4대보험 관련하여 세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성평등노동기본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 2. 각 당 주요 공약 분석

### (1) 성별임금격차 해소

개혁신당	X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li> <li>-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li> <li>-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li> <li>- 직장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피해자 구제, 직장내 성폭력의 사용자 벌칙 조항 확대,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피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li> <li>- 부처 협업 통한 고용단절여성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li> </ul>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X
새로운미래	⑤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 -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새진보연합	1. <b>성별 임금평등법</b> 제정 - 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비율, 성별 승진 상황 등을 공개하는 <b>성별임금공시제</b> 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에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진보당	① <b>성평등노동기본법</b> 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㉔ <b>성평등임금공시제</b>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 급여액의 1% 벌금 징수
조국혁신당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더불어민주연합	▲ 성별 임금차별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법제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놓쳐 본 일 없는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몹시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의제에 대한 각 당의 온도 차는 다르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이 없다. 새로운 미래는 '성차별 없는 노동사회 구현', 조국혁신당은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이라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재한 선언을 담고 있을 뿐이다. 녹색정의당(성별임금격차해소법), 새진보연합(성별임금평등법), 진보당(성평등노동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법의 이름은 다르지만 각 당이 담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고 보여진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규율하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유일하다. 허나 급격하게 달라지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또한 성별의 구분도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점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다. 성평등 노동 실현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별도의 법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 -채용성차별·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임금공시 및 개선방안, 노동자 정의에서 배제된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율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본법으로 같지 개별법으로 같지에 대한 논의는 차 후 필요할 것이다.

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근로공시제)는 실행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정당이 제안했던 정책이었다. 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근로공시제)는 정보 공개뿐 아니라 공개의 강제성이 담보되고 이후 개선방안, 상벌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정의당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와 진보당의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제도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폭력 문제는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입법 미비와 문제의 개념화가 더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녹색정의당의 제안이 입법 및 정책화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2) 노동시간

개혁신당	-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및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li> <li>-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li> <li>-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li> <li>○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li> <li>-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li> <li>-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li> <li>-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li> </ul>
더불어민주당	○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

	-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새로운미래	②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 - 법정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새진보연합	주 3일 휴식제(주 32시간 노동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2030년까지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 -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주 6시간 상한으로 단축함
진보당	9.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5인 미만,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 마련 -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5인 미만 사업장 및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우선 도입 ○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조국혁신당	X
더불어민주연합	X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현 정부가 역행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와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연합,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제안된

내용이 없다. 언급이 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혁신당만 다른 결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및 현재의 주52시간 노동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제안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새로운미래는 주4일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2시간, 새로운 미래는 35시간을 제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시간에 대한 제안이 없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1일 노동시간에 대한 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주4일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 삭감 없이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고 있는 곳은 진보당이다. 또한 진보당이 제안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이채롭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의 득실을 잘 따져 보아야할 것이다.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각각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와 야간노동 최소화를 제안하였는데 이 또한 의미있는 정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은 없다.

### (3)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개혁신당	X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최저소득 보장 등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보험급여의 선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새로운미래	① 노동관계법 정비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새진보연합	X
진보당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li> <li>-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납입으로 요건 완화</li> <li>- 초단시간 노동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비례적 보장 취지에 맞게 조정</li> <li>- 자영업은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li> <li>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li> <li>○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 직종 구별없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li> <li>-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절차와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li> <li>○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제외,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li> <li>○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li> <li>-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li> <li>-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중 재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li> <li>○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li> </ul>
조국혁신당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li> <li>▲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li> </ul> </li> <li>-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현재 노동관계법에서 정의된 노동자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다.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고용형태를 지나치게 다양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되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권 박탈은 불행히도 합법이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다. 명시적으로 이 이름을 제안하고 있는 곳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이다. 새로운미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



대”를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받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보험 확대를 제안하였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새진보연합은 관련 정책을 내지 않았다.

#### (4) 채용성차별

개혁신당	X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더불어민주당	○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 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새로운미래	X
새진보연합	성별 임금평등법에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비율 명시
진보당	㉠ 채용성차별 금지
조국혁신당	X
더불어민주연합	X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채용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채용절차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벌칙조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 각 당이 채용성차별과 관련하여 제안한 정책들은 진보당의 채용성차별금지처럼 선언적 내용과 실제 규율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채용성차별 기업 벌칙강화를 제안한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2018년 정부가 제출했던 채용성차별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허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새진보연합이 제안한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비율 명시도 차별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비율만 명시한다고 차별로 판단하긴 어렵다. 여기에 차별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국제적인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공인받고 있는 4/5룰<sup>23)</sup>을

23) 자연적인 상태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선택될 수는 있으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4/5 미만인 경우는 자연상태가 아닌 차별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집단의 선발률/다른 집단의 선발률이 다른 집단 선택 비율의 80프로 이상이 되어야 차별이 아닌 상태로

채택하면 좋을 것이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연합, 국민의미래, 자유통합당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 (5)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개혁신당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보장
국민의힘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녹색정의당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현행 10일 → 30일)
더불어민주당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새로운미래	③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감시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노동자가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새진보연합	-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출산전후 10일에서 40일로 확대하고 의무화
진보당	㉔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바로복직제’ 실현
조국혁신당	X
더불어민주연합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
국민의미래	X
자유통합당	X

판단할 수 있다. 예) 남성합격을 0.98%, 여성 합격을 0.59%인 경우 여성합격률/남성합격률 = 0.602 < 0.8 이므로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1971년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실행위원회(FEPC)가 설립한 TACT(기술자문위원회)에서 처음 제정했다. 법적 정의는 아니지만 평등고용 기회위원회(EEOC)에 명시되어 있다. 지침이며 차별 혐의에 대한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 세계 기관에서 채택한 경험 법칙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확대에 대한 정책제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혁신당의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더불어 민주당의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 보장이 눈에 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노동자에 한해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는 배제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미래에서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여러당들의 제안이 있는데 녹색정의당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국민의힘은 1개월, 새진보연합도 40일 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확한 기간 확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간 확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최대 21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급여인상 추진을 제안하였다. 조국개혁신당과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관련 정책제안이 없다.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는 현행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기간과 급여를 모두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각 당들의 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 (6) 육아휴직 & 자녀 돌봄

개혁신당	X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li> <li>-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li> <li>-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li> <li>-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li> <li>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li> <li>-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li> <li>-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li> <li>-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li> </ul>

<p>녹색정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li> <li>○ 눈치 안 보고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li> <li>-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li> <li>-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li> <li>-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lt;대체인력지원센터&gt;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li> <li>○ 성평등 돌봄, 일·생활 균형 실현</li> <li>- 돌봄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유연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분할 확대</li> <li>- 직장 복귀 후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25% 규정 폐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상한 인상)</li> <li>-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lt;대체인력지원센터&gt;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li> <li>-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및 위반, 반복시 가중처벌 등 관련 법 감독 강화</li> <li>-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부담 비율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li> </ul>
<p>더불어민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li> <li>-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li> <li>-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li> <li>-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li> <li>-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li> </ul>
<p>새로운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중소기업·자영업자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li> <li>-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 감독 감시</li> <li>-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노동자가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li> <li>④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li> <li>-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li> <li>-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li> <li>-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li> </ul>
<p>새진보연합</p>	<p>2. 성평등한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확대와 소득대체율 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함</li> <li>-1년간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남은 6개월은 90%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소득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한액을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함</li> <li>•엄마아빠 육아휴직 할당제</li> <li>-18개월 이하 영아 돌봄 육아휴직의 아빠 6개월 이상 참여시 부와 모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100%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급여 상한액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기간에 따라 첫 1개월 300만원에서 마지막 6개월 550만원으로 상향함</li> <li>•한부모 가정의 경우 1년 6개월 육아휴직 전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직급여 상한을 500만원으로 함</li> <li>•육아휴직 불이익금지법</li> <li>-‘불리한 처우’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li> <li>-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을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대상으로 하여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함</li> </ul>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li> <li>㉡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li>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바로복직제’실현</li> </ul>
조국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li> <li>·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li> <li>·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벨 직장문화 확산</li> </ul>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 조성, 권리 보장</li> <li>-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li> </ul>
국민의미래	X
자유통합당	X

육아휴직과 자녀돌봄 부문에 있어 각당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제도 사용의 용이성,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할당제),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연합, 새진보연합에서 발표하였다. 제도사용 측면에 있어서 현재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청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당은 국민의힘, 새로운미래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복직 이후에

일부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제도 폐지를 제안한 당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이다.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제안한 당은 국민의힘, 새진보연합, 진보당이다. 현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일정기간 고용보험가입을 충족한 이들로 제한된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새로운미래는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의 육아휴직 한부모에 대한 기간연장과 급여 인상·육아휴직 불이익금지법, 진보당의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가 독특한 정책으로 이채를 띤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권리 보장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임을 감안하여 모든 당이 예외 없이 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허나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이 없다.

### (7)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개혁신당	X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능마켓 등에서 일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역배당대행업 등 일자리 중계거래 수수료 5% 상하제</li> <li>-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li> </ul> </li> <li>○ 노동시장 약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2027년까지 전체 적용</li> <li>- 초단시간 계약금지(갱신기대권 법제화)</li> </ul> </li> <li>○ 노동시장 격차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22대 국회 내 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30% 이내로 해소. 지불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납품단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li> <li>-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및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 및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의 업무까지 확대</li> <li>-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통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li> <li>-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li> </ul> </li> </ul>

더불어민주당	○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새로운미래	X
새진보연합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3.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 임금 배정, 계정 정지, 수수료 등 단가 결정, 등급·평점의 설계 및 작동 방식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시 플랫폼 기업에 노동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진보당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 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 돌봄자 연금·휴가지원
조국혁신당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더불어민주연합	▲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의 강화
국민의미래	X
자유통합당	X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부문에서는 각 당이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조금씩 달랐다. 녹색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배제를 해소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확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중계거래 수수료 상한제 등을 광범위하게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를 제안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동 중개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를 발표하였다. 진보당은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돌봄자지원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내

놓았다. 조국혁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더붙어민 주연합은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면밀히 살펴 집단의 특징에 맞는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각 당이 제안한 정책들은 모두 해당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로 전체적 추진이 필요하다.

### (8) 청년

개혁신당	X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li>-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갑질 근절</li> <li>-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li> </ul>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li> <li>- 청년 부채 해결.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 소득 상관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설치</li> <li>-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최대 3년), 지방대부터 무상기숙사 실시,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상향,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li> <li>-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li> <li>- 청년의회 설치 및 시범 운영, 지자체별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의무화</li> </ul>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li> <li>-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 개발카드' 지급</li> </ul>
새로운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청년 생활·주거 안전망 구축</li> <li>- 청년 생애첫든든통장(이자 5~6%,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4%)</li> <li>- 청년 기획금융통장(300만원 상당 소액대출·저축이 가능한 통장으로 금융안전망 구축)</li> <li>- 생애첫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확대)</li> </ul>



	④ 청년 노동·건강 안전망 구축 -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 -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HPV 무료 백신 ⑤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원→1,200만원)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새진보연합	3.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 만 20세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진보당	- 청년 이직준비급여 보장(수급기간 연장, 횟수제한 없는 이직준비급여)
조국혁신당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
더불어민주연합	X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청년공약은 크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으로 나뉘어 진다. 국민의힘은 채용 갑질 근절과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준비 지원을,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과 청년 일자리를 내걸었다. 복지 정책으로는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을, 진보당은 이직준비급여, 새로운미래는 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주택 대출과 고이율 통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미진학 청년을 위한 청년역량개발카드를, 녹색정의당은 청년부채 해결과 주거수당 등을 제안하였다.

청년 정책에서는 여성 청년에게 특화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각 당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고 자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년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제공자가 되어야 하며 공공이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행하는 성차별을 근절하고 비정규직과 하청 남용을 규제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9)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개혁신당	X	X
국민의힘	X	X
녹색정의당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X
더불어민주당	X	X
새로운미래	X	-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
새진보연합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고용형태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6. 생활동반자법 제정 -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율할 법률을 제정 -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혼인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에서 혼인·혈연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
진보당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동반자법 제정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주택지원 정책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구당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원 - 파트너 인증서 발급 :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는 성인 2인의 결합 관계 대상, 주택, 의료 혜택 등에 활용,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조국혁신당	X	X
더불어민주연합	X	X
국민의미래	X	X

자유통일당	4.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X
-------	--	---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뿐 아니라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명시한 당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이다. 반면 자유통일당은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을 공약으로 내걸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지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 하는 관계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법이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는 과정로서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을 흔들며 성별고정관념과 성역할 분리 약화라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서 제안하였는데 새로운미래는 돌봄중심을 명시하여 방점이 돌봄에 가 있음 드러내고 있다. 반면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제안하고 있다.

#### (10) 최저임금

개혁신당	낮은 규제 및 복지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 최저임금 제도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중심사회’ - 최저임금 정상화, 노동시장 약자보호 : 최저임금 산업범위 원상 회복.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X
새로운 미래	X
새진보연합	X
진보당	X
조국혁신당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더불어민주연합	X
국민의미래	X
자유통일당	X

최저임금 관련한 공약을 제안한 당은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은 정책 4순위로 ‘낮은 규제 및 복지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제도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이다. 하지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다. 본 정책은 일자리의 질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 더 낮은 임금은 여성의 몫이 될 것이다. 현재의 낮은 임금을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성별임금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부추길 정책이다.

반면 녹색정의당이 정책 4순위인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중심사회’에서 제안한 정책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정상화, 노동시장 약자보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 회복.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로 지난 2019년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약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변화가 쉽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싸구려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개혁신당의 정책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 (10) 기타

개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임용 시 병역필 의무화</li> <li>- 남/여 구분 없이 군 복무 이력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li> <li>-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일반병으로 복무 후 해당 직렬 공무원 지원</li> </ul> </li> <li>○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중인 계급 정년제도 폐지를 통해 군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보장하여 군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li> </ul>
국민의힘	X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사업으로 우선재고용 명문화/ 원거리 고용시 5년간 주거, 교통비용 지원</li> <li>- 우선재고용 어려운 경우 전환수당 지급. 지역공동화 막기 위해 발전소 폐쇄시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영향받는 자영업자 등에게도 전환수당 지급</li> <li>- 노정교섭 활성화</li> </ul>
더불어민주당	X
새로운미래	X
새진보연합	<p>6-4. 손배·가압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힘</li> <li>•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li> </ul> </li> <li>•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포괄적 권익 보호를 위한 쟁의행위를 합법 쟁의로 인정함</li> </ul> <p>6-5.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별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li> <li>•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이 지역 동종업종 전체에 적용되도록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함</li> </ul> <p>6-6.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의 노동 3권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강화함</li> </ul> <p>8-6. 노동법원·인권법원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과 인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로 노동권과 인권의 강화를 도모함</li> <li>•재판 과정의 녹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판결서 공개를 대폭 확대해 사법 과정의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함</li> </ul>
진보당	<p>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p> <p>○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li> </ul> <p>○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p> <p>○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li> </ul>

	<p>년 크레딧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와 무급 돌봄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최대 10년 가족중 1인/평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국가 지원)</li> <li>-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li> </ul> <p>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li> <li>-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li> <li>-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li> <li>-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li> <li>○ 상병수당 실시</li> <li>-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li> <li>-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후부터 지급</li> <li>-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li> <li>- 위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li> <li>○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li> <li>○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li> <li>○ 이직과 총전을 보장하는 신설</li> <li>- 부분실업급여 도입,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이직준비급여) 허용, 사용빈도 제한</li> <li>- 재충전 급여 신설(8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 90% 고용보험에서 지급)</li> <li>-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발생시, 소득지원급여 지급</li> </ul>
조국혁신당	X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 마련</li> <li>▲ 고용, 승진에 있어 지역·경제상황·성별·병역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방안 마련</li> </ul>
국민의미래	<p>9.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p> <p>2) 근로환경 격차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35세~60세) 근로자 세액공제 확대</li> <li>-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공휴일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li> <li>- 중소·중견기업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li> <li>-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li> </ul>
자유통일당	X

기타 부문은 각 당이 내 놓은 독특한 공약들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혁신당은 여성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내 놓았다. 이는 병역을 필하지 않는 이들을 오로지 여성으로만 사고하는 편협한 정책으로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에 심각한 성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공약이다. 한마디로 폐기가 필요하다. 반면 군 계급 정년제도 폐지는 개혁신당의 정책 목표와는 다르지만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군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피해를 제기한 여성들은 폐쇄적인 군대 안에서 배제와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높다. 이는 승진누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 계급 정년 탓에 군에서의 승진은 몹시 민감한 문제이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유일하게 제안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의 정책 중 이채로운 것은 노동법원·인권법원 설치이다. 노동법원은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노동자가 판결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대신하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 피로감이 높다.

진보당의 공약 중 1인 1연금 제안은 현재 가족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하는 변화와 가입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돌봄 크레딧을 도입하는 제도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마련은 현행 사각지대가 넓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안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변화이다.

국민의미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 적용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을 내걸고 있다. 현행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닌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의구심이 있으나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 3. 제언

성평등 노동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는 고민은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의 이분법을 어떻게 해체하고 대체할 모델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이다. 사회 구조 구석구석에 놓인 성차별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돌봄자-노동자-시민”이라는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상상력과 이를 구체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기본은 모든 시민을 가족 안에 묶인 존재가 아닌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구조 속에서 성차별은 온존할 수 밖에 없다. 가족 내의 역할과 책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고 사회에서도 이를 달리 사고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일과 책임을 요구하는 성평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치 공약은 정당으로서의 집권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자 시민들에게는 사회 변화 방향에 대한 길잡이이자 구체화되어야 하는 내일의 현실이다. 각 정당은 앞다투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주권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공약 안에 흐르는 일관된 정치 철학이다. 공약없이 정쟁만이 판치는 선거판이다. 이 싸움판에서 본 글이 각 당이 성평등 노동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은 도움되길 바란다. 선거 후 우리는 정당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가에 대한 감시와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여성주권자들은 매 선거 때만 구경하는 장밋빛 미래 전망이 아니라 하나라도 달라진 오늘을 바란다.



【첨부자료】

##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거제

- 여성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p><b>1.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 성평등한 삶과 일의 공존</b></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돌봄 관점의 재구성 :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li><li>● 주 35시간 근무제</li><li>● 돌봄권 사각지대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li><li>●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하는 모든 부모(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포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li><li>● 유급돌봄노동 저평가 해소 및 공공성 강화</li></ul>
<p><b>2.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 청년여성노동자의 독립된 삶 보장</b></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li><li>● 독립과 생계유지를 위한 청년수당 도입</li><li>●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li></ul>
<p><b>3.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b></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평등 공시제 법 제정</li><li>● 채용성차별 근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li><li>● 여성 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li><li>●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li></ul>
<p><b>4. 안전한 일터 :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b></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각지대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li><li>●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li><li>● 체불 임금에 대한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li><li>●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li><li>●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유지 매뉴얼 신설</li><li>● 기후재난 대비 &amp; 성평등한 산업재해 보상제도 마련</li></ul>
<p><b>5.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b></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li><li>●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및 노동조합 탄압 금지</li><li>●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li><li>●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li><li>●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삭제</li></ul>



#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1. 총평: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2024 총선은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의 대결 구도와 ‘제3지대’의 등장 속에서 각 당과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제 정당의 이합집산이 부각되었다. 지난 2월 29일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다. 고령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출생률이 국력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출생 정책이 여야의 정책 대결로 언론에서 비교·분석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살아남기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 살게 하기도 어려운 사회다.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한국 사회는 발전과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돌봄과 재생산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총선 정책은 향후 5년 한국 사회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당의 10대 과제에서 돌봄 정책은 저출생 정책으로 흡수되었다. 아예 관련 정책이 없는 자유통일당과 돌봄 관점으로 통합하여 제안한 진보당 외에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모두 저출생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저출생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정책은 신혼부부, 자녀 출생 가구 대상 주거 지원과 육아휴직 강화 정책이다. 저출생 정책이 사회구조에 대한 장기적 개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출산·양육 장려 정책에 집중하는 미시적인 관점에 그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돌봄 공공성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되어있어 비교적 근본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정책 제목에 “돌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개혁신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자유통일당의 정책에서는 돌봄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대상별, 분야별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돌봄에 대한 협소한 관점이 드러난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하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과 돌봄노동 가치 제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 비율 확대 등 통합적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녹색정의당은 통합돌봄, 노후 보장,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자지원법, 돌봄노동자기본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돌봄 정책 모두 목표와 정책 자체가 아주 협소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내용이 간략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목표의 나열에 불과한 정책이 많았다.

## 2. 주요 공약 분석

### 1) 저출생 정책

#### ① 대응하겠다는 말 뿐인 저출생 담당 부처 신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정책 담당 부처 신설을 제시하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책이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에도 저출생 책임부처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이 있다. 세 당 모두 흩어져있는 저출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떤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전면 부정되며, 성평등 관점이 삭제된 채 결혼·출산·양육 장려 중심의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퇴행한 바 있다. 출생율이라는 지표 올리기에 급급하여 가임기 여성을 관리 대상으로 보며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출생 정책은 모든 시민의 삶과 권리를 고려하며 사회구조 전반에 장기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 ② 여성의 몸과 아동을 담보로 한 주거, 현금 지원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정책과 결혼·출산지원금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거 지원 정책은 2자녀 가구에 24평형, 3자녀 가구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결혼·출산지원금 정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분야가 아닌 청년 정책에서 예비부부·혼인 1년 내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주거 지원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도 대상으로 하여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진보당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임대(시세 30% 수준), 공공자가(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원대 건설원가 아파트) 공급 정책과 첫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제공(생활동반자에게도 공급)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출산을 주거, 현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 노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만 주거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총체적인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출산할 수 없거나, 출산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이미 태어난 아동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출산에 대해서만 주거와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복지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성차별이 심각하고 아동의 지위가 낮은 한국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과 아동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책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할 점도 한계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관계를 넘어 가족 개념의 인식이 확장되고,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과 공동주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 아동의 60% 이상이 혼외 가정에서 태어나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 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 혼인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출산과 양육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통념에 기반하며 다양한 가족 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배제한다.

### ③ 돌봄 책임을 가족, 여성에 전가하는 협소한 출산, 육아 중심의 정책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을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중심으로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0~20세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미래는 관련 정책이 없고,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를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 지원금,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바우처),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아이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간과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써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없이 유자녀 가구 직접 지원과 출산휴가, 육아휴직만 강조하는 정책은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사회 인식과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장시간 노동이 그대로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노동자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부 노동자에게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가능한 기간을 보장해주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성별 분업구조에 대한 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을 단속하고 육아기 단축 근로 및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는 양육 지원 대책은 오히려 돌봄을 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여 채용, 승진 차별 등 노동 지속의 위

기를 겪게 할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미래·저출생·청년 정책으로 연금개혁,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 제도,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노동 정책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중소기업사 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을 제안하였고, 돌봄 정책을 별도로 제안하였다. 저출생 정책 부분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1인 가구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변화한 삶과 가족 실천을 짚어냈다는 의 미가 있으나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성평등, 돌봄 정책을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육아친화사회 구축,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성별임금격 차 해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부족하여 목표의 나열에 가깝다.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정책의 원인을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 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으로 분석하며,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 책을 제시하였다. 공공병원 산부인과 설치 등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 주4일제 도 입 및 연차휴가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기본권 보 장, 국공립어린이집 50% 등 아동돌봄 공공성 확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1] 정당별 저출생 정책

정당명	정책 내용	
개혁신당	제목	[보건복지·청년·여성] 낯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 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목 표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및 자산 양극화 대책 마련
	이행방법	○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 지급 (유산, 사산 포함) -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p>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li> <li>-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4인가족 기준, 월 5,729,913)</li> <li>- 액수는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li> <li>- 월20만원 X 12개월 X 230,000 (신생아 수, 2023 기준) / 2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연 2,760억 가량 펀드 조성</li> </ul>
	재원 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li> <li>○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li> <li>○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li> </ul>
국민의미래	없음	
국민의힘	제목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li> <li>◎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li> <li>◎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li> </ul>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li> <li>-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li> </ul> </li> <li>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li> <li>-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li> <li>-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li> <li>-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li> <li>-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li> </ul> </li> <li>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li> <li>-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li> <li>-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li> </ul> </li> </ul>
	재원 조달방안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2024년 현재 고용보험기금 현금성자산 보유액 7조원 규모, 이 중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의 현금성자산은 4조원)



녹색정의당	제목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목표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
	이행방법	<p>〈저출산 5대 핵심 정책〉</p> <p><input type="checkbox"/> 10년+10년 집 걱정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li> <li>- 대상: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li> <li>- 기간: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li> <li>-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 의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 및 주거지원비(월 60만원)</li> <li>-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li> </ul> <p><input type="checkbox"/>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li> <li>-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 서비스 마련</li> <li>-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li> </ul> <p><input type="checkbox"/>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li> <li>-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li> <li>-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li> </ul> <p><input type="checkbox"/>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li> <li>-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li> <li>□ 사교육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li> <li>-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li> <li>-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형 교육</li> </ul> </li> <li>〈안심 보육, 아동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li> <li>-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아동 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li> <li>-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 도서관 확대</li> <li>-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해외입양 일몰 선언,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li> <li>-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li> <li>-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li> </ul> </li> <li>〈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1부터 한반 20명,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 지방대부터 무상</li> <li>- 제대로 된 유보 통합 및 영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li> </ul> </li> <li>□ 입시 사교육비 경감 /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대학 상향평준화, 대입 절대평가,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li> <li>-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코로나 결손 지원, 생태교육 등 미래 녹색교육,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첨제</li> </ul> </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주교 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정부부터 고졸채용,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격차 해소,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li> <l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른 대학지원, 총액인건비제 개선</li> </ul> </li> <li>□ 학교구성원 권리 증진 / 서민 위한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권법 마련, 교원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직원 총원,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공무직 법적 투명인간 해소, 성과급제 폐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li> <li>-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시민학습공동체 지원, 지역 밀착 고등평생직업교육</li> </ul> </li> </ul>
	이행기간	22대 국회 임기 내 실현
	재원 조달방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조달
더불어 민주당	제목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목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li> <li>-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li> </ul> </li> <li>○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li> <li>-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li> <li>-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li> </ul> </li> <li>○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li> <li>-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li> </ul> </li> </ul>

		<p>이돌봄 특별(무상)바우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li> <li>-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li> <li>-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li> <li>-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li> <li>-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li> <li>○ 지자체 협력형 운동네 초등볼보재능학교 도입</li> <li>○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li> </ul>
	이행기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재원 조달방안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더불어 민주연합	제목	[보건복지]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li> <li>-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li> </ul>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li> <li>-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li> <li>-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난임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대책 강화</li> <li>- 지역에서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양질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li> <li>- 혼인·출산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마련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li> <li>-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 조성, 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li> </ul>

		-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과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수당액 인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 확대 등 추진
	이행기간	- 2024~2025년 : 법률 제 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5년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정책 추진
	재원 조달방안	-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부자감세 철회 통한 확보
새로운미래	제목	[기타(미래)/기타(청년)] 미래·저출생·청년
	목표	○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비
	이행방법	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 보험요율 상향 12~15%, 수급율 40% 유지 - 장기연체 및 납부예외자 두루누리 사업 적용 - 출산·양육 크레딧 개선한 '부모연금' 도입,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확대 ②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제도 도입 -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 - 1인가구 컨트롤 타워 설치 ③ 청년 생활·주거 안전망 구축 - 청년 생애첫든든통장(이자 5~6%,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 4%) - 청년 기회금융통장(300만원 상당 소액대출·저축이 가능한 통장으로 금융안전망 구축) - 생애첫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기준 확대) ④ 청년 노동·건강 안전망 구축 -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 -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HPV 무료 백신 ⑤ 위기 청년 안전망 구축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확대(하한 1,000만원→1,200만원)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내 가족돌봄청년 가산 도입 -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체계 구축
	재원 조달방안	- 국민연금 연금금 조정 및 국고 지원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자유통일당	없음	

조국혁신당	제목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li> <li>-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li> <li>-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li> <li>-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li> </ul>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li> <li>-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li> <li>-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li> <li>-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li> <li>-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li> <li>-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li> <li>-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li> <li>-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li> <li>-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li> <li>-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li> <li>-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벨 직장문화 확산</li> <li>-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li> <li>-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li> <li>-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li> <li>-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li> <li>-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li> <li>-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li> <li>-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li> </ul>

		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이행시기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 조달방안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진보당	없음.	

## 2) 돌봄 정책

### ①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정책 설계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의 정책에는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정책 설계가 부재하였다.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 자유통일당의 정책 제목에는 “돌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자유통일당은 제시한 돌봄 정책이 없다. 개혁신당의 정책은 폐교에 공공요양원을 설립하는 정책 하나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에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및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 세 가지만 제시하고 있어 돌봄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최후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외로움 정책도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외에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정책을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은 “돌봄”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일부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만 제시하였다. 국민의미래는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유보통합 등의 교육정책과 장애인 지원 정책을 돌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으나 활동지원, 탈시설, 일자리 등의 정책은 없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늘봄학교 등을 돌봄·양육환경 정책으로 제안하였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식사·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확대, 노후 건강증진 등을 “어르신” 대상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저출생 정책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보육, 육아친화 사회 구축,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목표의 나열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하다. 새로운미래는 돌봄 정책으로 돌봄청 설치, 복지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이외에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으로 대상을 나누어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협소하거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목표만 나열하였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보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돌봄 정책을 제안하였다.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정책과 돌봄 정책을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돌봄 정책에서 돌봄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워 생애통합돌봄을 강조하였다. 녹색정의당은 통합돌봄, 노후 보장,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노동 분야에서 돌봄시간 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돌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플래너 도입,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등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다. 노후 보장 정책으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인최저소득보장제, 일자리 확대, 공공 주거 지원, 장기요양 공공 비율 확대, 공공 장례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진보당은 다른 당과 달리 저출생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 아니라 돌봄 정책의 틀로 아동수당, 초등돌봄 등을 포함하였다. 육아휴직 강화 정책은 성평등 정책에서 제안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정책에서 제안하고 있으나 돌봄 정책에서도 언급하였다. 진보당은 돌봄국가책임제를 돌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노후와 관련하여 4대보험 정책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돌봄국가책임제 정책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세 가지 분야



로 구분하였다. 각각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 돌봄을 받을 권리와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 마련, 돌봄수요자, 돌봄노동자, 비공식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정책으로 제안하며 돌봄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어 돌봄을 할 권리를 주요 정책으로 포함한 점이 유의미하다. 4대보험 정책에서는 노후 보장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당연 가입,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해 양육 크레딧과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제안하였다. 건 강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 ② 돌봄 정책 추진체계와 돌봄 가치 및 권리 법제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돌봄 정책 추진체계 도입을 새롭게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정의당은 전생애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해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제안하였다. 새로운미래는 돌봄청 신설 및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을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내용은 비어있다.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마련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제안과 논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체계와 돌봄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기반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이다.

### ③ 돌봄 공공성 강화 - 공공 비율 확대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 비율 확대 정책이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 중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돌봄 책임을 또다시 가족에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이

다. 민간 돌봄을 확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돌봄의 공공 비율이 부족하고 돌봄 노동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녹색정의당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국공립 장기요양 30% 확대를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민간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공공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sup>24)</sup>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2%, 공공보육 이용률은 36.8% 수준에 불과하다(2022년 12월 기준).<sup>25)</sup> 공공 비율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④ 돌봄 노동

돌봄직 노동자의 92%가 여성 노동자이며, 월 임금 수준은 남성 205만원, 여성 149만원에 불과하다.<sup>26)</sup> 돌봄노동은 성별 분업구조 하에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의 연장선으로 여겨져 가치 절하되었고, 돌봄노동의 저평가는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졌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돌보고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와 더불어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은 돌봄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정책이 전무하다. 돌봄 정책을 제시하는 당의 정책에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이 부

24) 장기요양 수급자 급증, 2027년 7만5천명 부족 예상, 내일신문, 2023년 10월 10일. <https://www.naeil.com/news/read/475812>

25)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6)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와 구조적 문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박영민, 2024.

재하다는 것은 무엇이 원인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녹색정의당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담인력, 사립유치원 교사, 돌봄전담사, 장기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통합돌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공돌봄센터’ 설치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진보당은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임금,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돌봄노동자 노동조건을 폭넓고 구체적으로 포함한 권리 보장 정책을 제안하였다.

[표2] 정당별 돌봄 정책

정당명	정책 내용	
개혁신당	제목	[보건복지·청년·여성]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목표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이행방법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폐교 인근 고령층 지역주민 대상 입주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지방에 있는 공공요양원 입소 시 추가 혜택 부여로 지역으로 인구 분산 유도
	재원 조달방안	○ 법안 발의를 통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세출 구조조정, 고용보험 기금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23~27년) 상의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국민의미래	제목	[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안전/사법윤리]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목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이행방법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p>2)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li> <li>-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국 확대</li> <li>-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li> <li>- 학교내 마음건강 진단 및 전담병원 연계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li> </ul> <p>3)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우선 추진</li> <li>-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li> </ul> <p>*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li> </ul>
	재원 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재원 활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운용기한 연장 추진(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제목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li> <li>-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li> <li>-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li> <li>-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li> </ul>
	이행방법	<p>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중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li> <li>-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li> </ul> <p>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li> <li>-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li> </ul> <p>3)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 정립</li> <li>-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 확대</li> <li>- 은퇴견 사후지원제도</li> </ul>

		<p>4)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li> <li>-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li> <li>-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li> </ul> <p>5) 디지털 격차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 지원</li> <li>-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li> <li>-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li> </ul>
	<p>재원 조달방안</p>	<p>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p>
국민의힘	<p>제목</p>	<p>[보건복지, 교육]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p>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li> <li>○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li> <li>○ 돌봄 격차 해소</li> </ul>
	<p>이행방법</p>	<p>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li> <li>-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li> <li>-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li> <li>-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li> </ul> <p>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li> <li>-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li> <li>-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li> </ul> <p>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li> <li>-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li> </ul>
	<p>재원 조달방안</p>	<p>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p>
	<p>제목</p>	<p>[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타(주거복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p>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li> <li>○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li> </ul>	

		○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이행방법	①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②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③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④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재원 조달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녹색정의당	제목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목표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 보장
	이행방법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 의무화 - 돌봄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예산편성권 보장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li> <li>-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li> <li>-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li> </ul> <p>□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최저소득보장제(보충급여, 월 최대 30만원)로 후기고령층의 노인빈곤(54%, 22년) 해소</li> <li>-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 정년 연장,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li> <li>- 편의시설과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 원룸형 실버주택 확대</li> <li>- 국공립 장기요양 30% 확대, 방문재활급여 등 급여 다양화,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li> <li>-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li> </ul> <p>□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설치</li> <li>-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li> <li>-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 국립대 의대 증원</li> <li>-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혼합진료 금지 및 적정수가로 비급여 해소</li> <li>-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li> <li>-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국민 산재보험</li> <li>-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 센터 확대 강화</li> <li><input type="checkbox"/>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지역마다 '문화마을'</li> <li>-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li> <li>-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 금지,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li> <li>-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li> <li>-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 보장</li> <li>-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생 통한 기반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조성</li> <li>- 완전도서정가제 시행, 동네서점·도서관 지원 확대,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li> </ul>
	이행기간	22대 임기 내 실현
	재원 조달방안	법 제도 개선사항,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제목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목표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li> <li>-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li> <li>-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li> </ul>
	이행시기	22대 국회 임기 내
	재원 조달방안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
더불어 민주당	제목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경제재정, 보건복지, 교육, 여성, 농림해양수산]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목표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
	이행방법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이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li> <li>○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li> </ul>



		되도록 추진
	재원 조달방안	○ 그 외 소요비용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 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제목	[보건복지,노동,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목표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질 개선 ○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이행방법	○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조직 설치, 청(소)년,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이행시기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자
재원 조달방안	연평균 1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 비용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더불어 민주연합	없음	
새로운미래	제목	[보건복지/여성] 포용 복지·포용·돌봄
	목표	○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이행방법	① 돌봄청 신설 - 돌봄청 설치 -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② 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확대 - 국가책임장려제 도입 ③ 어르신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보험 개편</li> <li>- 치매가족 산정 특례 적용</li> <li>- 어르신 돌봄노동자 확대</li> <li>-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2개에서 4개</li> <li>④ 장애인 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 강화</li> <li>- 연령별·유형별 복지 확대(발달·정신·노린학습자·고령장애 등)</li> <li>- 이동편의법·편의증진법 개선</li> </ul> </li> <li>⑤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유지·강화</li> <li>-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li> <li>-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li> </ul> </li> </ul>
	재원 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자유통일당	없음	
조국혁신당	제목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li> <li>-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li> <li>-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 친화사회 구축</li> <li>-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 보장</li> </ul>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li> <li>-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li> <li>-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li> <li>-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li> <li>-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li> <li>-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li> <li>-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 제보육 확대</li> <li>-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li> <li>·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li> <li>·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li> <li>·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li> <li>·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li> <li>·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li>   <li>-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li> <li>·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li> <li>·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 모델 연구</li> <li>·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 모델 입법</li> <li>·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li>   <li>-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li> <li>·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li> <li>·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li> </ul>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li> <li>·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li> <li>·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li> </ul>
재원 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li> <li>-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li> </ul>
제목		[기타]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li> <li>-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li> <li>-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li> </ul>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li> <li>·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li> <li>·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li> </ul>
	이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li> <li>·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li> <li>·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li> </ul>
	재원 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li> </ul>
진보당	제목	[재정경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목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자산재분배 공약</li> <li>○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50만원까지 지급</li> <li>- 소득 70% 이하 노인 40만원, 소득 40% 이하 50만원 지급</li> </ul>
	이행시기	임기시작 시
	재원 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자산가 부자증세(고자산가 부유세·상속세)</li> <li>- 은행 및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 환세세 부과로 재원마련</li> </ul>
	제목	[보건복지]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li> <li>○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li> <li>-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li> <li>○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li> <li>○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li> <li>-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년 크레딧 인정-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와 무급 돌봄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li> </ul>

		<p>(최대 10년 가족중 1인/평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국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li> <li>○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습, 유족연금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유지</li> <li>○ 적정 수준이 보장되는 수급액으로 지원</li> <li>- 기초연금 인상 및 저소득층 추가 지급, 생계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전액공제</li> <li>-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장애연금 확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지급</li> <li>○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 수입의 50%, 기초연금의 70% 이상 국고 투입</li> <li>- 사업장 가입 지원,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원</li> </ul> <p>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li> <li>-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li> <li>-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li> <li>-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li> <li>○ 상병수당 실시</li> <li>-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li> <li>-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후부터 지급</li> <li>-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li> <li>- 위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li> <li>○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li> <li>○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li> </ul>
이행시기		임기시작시부터 단계별 추진
제목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목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이행방법		<p>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li> <li>-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li> <li>- 돌봄민주주의 실현</li> </ul> <p>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마련</li> <li>-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 마련</li> <li>-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li> <li>-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li> <li>-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 휴가지원</li> </ul> <p>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p> <p>㉠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li> <li>-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li> <li>-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li> <li>-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추진</li> </ul> <p>㉡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li> <li>-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li> <li>-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과 준비</li> <li>-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전문인력 및 감염예방 교육 강화</li> <li>-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li> </ul> <p>㉢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 활용,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해 신축시 지원되는 비율</li> </ul>
--	---

		<p>을 차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처우 개선</li> <li>㉔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li> <li>-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li> <li>㉕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li> <li>㉖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li> <li>-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li> <li>- 긴급호출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안전, 건강위기)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 출동</li> <li>-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 지역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수시로 상담, 주민센터와 연계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세탁소 등 1인 가구 공유 서비스 활성화</li> <li>㉗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li> <li>-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li> <li>- 민간위탁 종료 시설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li> <li>㉘ 노인돌봄체계 강화</li> <li>-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li> <li>-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li> <li>- 요양 돌봄 서비스,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거주지원 서비스 확충</li> <li>-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li> <li>㉙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li> </ul>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상반기

### 3) 가족구성권 정책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가족'에 한정된 제도는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하지 못한다.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돌봄과 생계가 법적가족 안에서 수행되고 분배될 것이라 전제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이 돌봄과 생계, 주거를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자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리를 부여 해왔던 기존 법적 가족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법제화 저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미래는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녹색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를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 개 현행법 정비에 대한 정책도 포함하였다.

[표3] 정당별 가족구성권 정책

정당명	정책 내용	
개혁신당	없음	
국민의미래	없음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제목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 다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목표	-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 차별금지법 제정 -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더불어 민주당	없음	
더불어 민주연합	없음	
새로운미래	제목	[기타(미래)/기타(청년)] 미래·저출생·청년
	목표	○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비
	이행방법	② 생활동반자법 및 1인가구 지원제도 도입 -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 - 1인가구 컨트롤 타워 설치



	<p>재원 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연기금 조정 및 국고 지원</li> <li>-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li> </ul>
자유동일당	<p>제목</p> <p>[정치]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p>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li> <li>-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li> </ul>
	<p>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애 법제화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li> <li>-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li> </ul> </li> <li>■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li> <li>-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li> <li>-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li> </ul> </li> <li>■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li> <li>■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사례 교육 및 홍보</li> <li>· 영국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 (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게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li> <li>· 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 (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오범죄라고 판결한 사건)</li> <li>·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 사건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li> </ul> </li> </ul>

		<p>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p> <p>■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법」 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li> <li>-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li> </ul>
	이행기간	22대 국회 임기 중
	재원 조달방안	재원 필요 없음
조국혁신당	없음	
진보당	제목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목표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이행방법	<p>③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p> <p>○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p> <p>○ 생활동반자법 제정: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주택지원 정책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구당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 인증서 발급: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는 성인 2인의 결합 관계 대상, 주택, 의료 혜택 등에 활용,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li> </ul>

### 3. 제언: 돌봄 중심 사회로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상을 바꾸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고 돌봄과 재생산을 담당할 것이라는 성별 분업구조에 기반한 '정상가족' 관념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돌봄 책임이 없는 남성 임금노동자를 시민상으로 전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권의 근간으로서 돌봄 관념이 자리 잡아야한다. 돌봄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사회구조 전반을 재구성하여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본 발표문은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 정책><sup>27)</sup>,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자료집><sup>28)</sup>,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돌봄·연대·정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 정책>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정당별 공약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 1. 여성폭력을 마주하는 22대 총선

22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4-5년 사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적극적으로 논의, 반영되어야 할 선거다. 2018년 미투운동과 불법촬영 공론화 등을 통해 일상과 사회조직에 만연한 성차별, 위계적 문화, 성적지배 ‘관행’이 드러났고, 20대 국회는 150여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최초의 ‘국민동의청원’인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회기를 종료했다.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 되려는 때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이 드러났다. 이 시기 정치영역에서의 성폭력, 성차별을 반성하려는 흐름, 성폭력 부정과 책임외면 하려는 흐름, 특정 당만의 문제로 비난을 전가하며 동시에 페미니즘을 문제삼는 ‘이대남’ 정치가 동시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권력 성폭력을 4대 폭력 중 하나로 내걸면서 동시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청년정책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격차로 고전하다가 막판 합류한 ‘N번방’ 성착취 대응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에게 표결집을 호소하자 박빙패로 대선을 마무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의 득표를 얻고 밤사이 2-30대 여성들에게

27) 2023.9.7.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 한국여성단체연합

28) 2023.12.19.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인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못미’ 12억의 선거후원금이 도달하였다.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제왕정치가 가속화했다가 ‘정권심판론’ 우세의 총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중심성 강화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을 공천과정에서 배제하였다. 이 상황에서 ‘페미 불공천’이 같이 주장되었고 당내 여성운동가 출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를 요구했던 정치인들이 공천과 경선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11년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공론화했던 정봉주가 공천했다가 가정폭력 사건 등이 알려지며 취소했고, 성폭력 가해자 변론을 변호사 광고에 활용하며 ‘전략’을 부추긴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했다가 문제제기를 맞이해 스스로 사퇴했다. 이를 당 내에서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를 낸 여성 정치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 일부는 얼굴 사진 유포, 조리돌림 등 온라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위한 ‘녹색정의당’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는데 일부 시민사회대표 등이 가세하여 형성한 ‘위성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단독으로 22대 총선을 지역구와 비례에서 전개하고 있다. 선거법개정과 정치개혁 지연의 과정 속에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왜곡된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제3당의 자리와 역할을 지켜갈 수 있을지, 거대 양당의 이분법적 정치의 남성중심성을 멈춰세울 수 있을지, 염려하고 기대한다. 그 외 제3지대를 자처한 정당들과 소수정당이 각각의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대남 정치를 선동하며 이를 ‘공정’과 ‘능력주의’로 정책화, 정치화하는 정당이나,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 등이 강성지지세력을 결집하여 국회 입성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혼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격이 큰 내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22대 총선에서 아예 침묵, 임박음에 가깝다. 그 결과는 거대한 남성중심적 후보, 선거 형성이다. 현재 22대 총선 지역구 등록 후보 중 여성은 총 699명 후보 중 99명으로,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에 불과하다. 21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비율은 19%였다. 22대 총선/국회에서 성평등, 젠더폭력 방지를 자신의 입법,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심의의 주제로 삼고 사회적 수준을 높여갈 대표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

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그래서 갱신되는 ‘남성중심정치’를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 2. 정당 공약 기조와 젠더폭력 관련 공약

본 장에서는 젠더폭력 공약이 각 정당별 어떤 공약 카테고리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비슷한 문구로 쓰였다 하더라도, 기조는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를 형성하므로 중요하다. 발제문 작성 당시 ‘원내 정당’이었던 10개 정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보았다.

<표1. 각 당의 10대 공약> (‘젠더폭력’ 관련 공약이 배치된 장은 볼드, 밑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경제재정, 보건복지, 교육, 여성, 농림해양수산]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li> <li>2. [보건복지, 건설교통, 노동, 여성, 교육]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li> <li>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li> <li>4. [과학기술정보, 통신, 교육, 건설교통, 산업자원,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li> <li>5. [보건복지, 노동,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li> <li><b>6.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b></li> <li>7. [기타(중소벤처), 산업자원, 재정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li> <li>8. [통일외교통상, 국방]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li> <li>9. [사법윤리,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li> <li>10. [사법윤리, 정치, 행정자치]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li> <li>2. [보건복지, 교육]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li> <li>3. [재정경제, 산업자원]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li> <li>4. [재정경제, 산업자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li> <li><b>5.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b></li> <li>6. [보건복지, 산업자원, 문화관광]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만들기</li> <li>7. [건설교통, 기타(주거복지)]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li> <li>8.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li> <li>9. [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타(주거복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li> <li>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li> </ol>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lt;기후&gt;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li> <li>2. [보건복지, 교육, 여성, 노동] &lt;저출생&gt;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li> <li>3.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lt;돌봄&gt;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li> <li>4. [노동] &lt;노동&gt;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li> <li><b>5. [여성] &lt;성평등&gt;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b></li> <li>6. [행정자치, 재정경제] &lt;지역소멸, 민생&gt; 지방대무 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li> <li>7. [행정자치, 보건복지, 사법윤리, 노동, 재정경제] &lt;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gt; 다 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li> <li>8.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lt;생태, 농어업, 먹거리&gt;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li> <li>9. [건설교통] &lt;주거&gt;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li> <li>10.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통일, 외교, 과학 기술정보통신] &lt;개헌, 사법, 언론, 남북, 외교&gt;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li> <li>2. [사법윤리]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li> <li>3. [재정경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li> <li>4. [보건복지·청년·여성]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li> <li>5. [통일외교통상·국방]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sup>29)</sup></li> <li>6. [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li> <li>7. [정치·문화·기타]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li> <li>8. [행정자치·기타]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li> <li>9. [건설교통·안전]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li> <li>10. [환경]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li> </ol>
진보당	자유통일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치] 검찰개혁 정치개혁</li> <li>2. [재정경제] 가계부채 해결</li> <li>3. [재정경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li> <li>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li> <li>5. [보건복지]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li> <li>6. [보건복지, 노동,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li> <li>7. [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li> <li><b>8.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b></li> <li>9. [노동]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li> <li>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관광]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li> <li>2. [보건복지]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li> <li>3. [국방] 전군 대학화</li> <li>4. [정치]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li> <li>5. [보건복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li> <li>6. [교육]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li> <li>7. [통일외교통상]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li> <li>8. [안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li> <li>9. [교육]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li> <li>10. [국방]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li> </ol>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연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사법윤리] 정치·사법·언론개혁</li> <li>[재정경제/산업자원] 경제 금융</li> <li>[노동/보건복지/여성] 노동</li> <li>[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환경] 과학·기술·미래 먹거리</li> <li>[보건복지/건설교통/안전] 생명과 안전</li> <li>[환경] 기후 위기</li> <li><b>7. [보건복지/여성] 포용 복지·포용·돌봄</b></li> <li>[기타(미래)/기타(청년)] 미래·저출생·청년</li> <li>[행정자치/교육] 인구소멸·균형발전</li> <li>[통일외교통상/국방] 외교·국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li> <li>[정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li> <li>[보건복지]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하겠습니다</li> <li>[산업자원 조세, 농림 해수] 녹색전환 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li> <li>[행안, 해수 법사, 노동]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li> <li>[경제]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li> <li>[노동]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li> <li>[농림, 해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li> <li>[복지, 금융, 국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li> <li>[산업자원 농림, 해양 수산, 외교]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li> </ol>
조국혁신당	국민의미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li> <li>[기타]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li> <li>[환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li> <li><b>4.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b></li> <li>[교육]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sup>30)</sup></li> <li>[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li> <li>[행정자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li> <li>[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li> <li>[재정]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안전/사법윤리]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li> <li>[보건복지/재정경제/건설교통/기타(청년)]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li> <li>[보건복지/여성/사법윤리/안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li> <li>[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li> <li>[통일외교통상/보건복지] 따뜻한 동행, 북한이 탈주민 두텁게 지원</li> <li><b>6. [보건복지/재정경제/사법윤리/안전/기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b></li> <li>[국방/보건복지/재정경제]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li> <li>[안전/사법윤리재정경제/노동/보건복지/기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sup>31)</sup></li> <li>[산업자원/노동/안전/재정경제]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li> </ol>

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10. [통일외교]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10. [환경/재정경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

‘젠더폭력’ 관련 과제를 어떤 카테고리로 배치하였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표와 같았다.

〈표2. ‘젠더폭력’ 관련 공약이 배치된 10대 과제의 키워드〉

성평등	녹색정의당
저출생 성평등 돌봄	조국혁신당
안전과 평등	진보당
안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포용 복지	새로운미래, 국민의미래
없음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로’ 라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다. 성별임금격차 문제와 성폭력 처벌 강화를 내걸고 세부 과제중 첫 번째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으로 삼았다. 성평등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것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 조국혁신당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생

29)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 신규 공무원(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임용 시 병역필 의무화
- 남/여 구분 없이 군 복무 이력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일반병으로 복무 후 해당 직렬 공무원 지원

30)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31) ■ 이행방법 및 기간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등

카테고리에 성평등과 돌봄, 젠더폭력 방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22대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정당에 '저출생' 관련 공약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저출생 공약에 '성평등'을 내걸었고 젠더폭력 방지가 연관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두 당이 '성평등'을 10대 공약 내에서 제목 상에 기재한 당인데 둘 다 '거침없이', '담대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성평등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정치권의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 과제에서 성평등이 거침없이 펼쳐져야 하며 담대한 변화의 마중물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젠더폭력과 성별임금격차가 해소가 각각 한줄씩, 총 두줄로 기재되어 있어, '성평등'을 내건 공약 중 많은 부분이 저출생 해결과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이를 통한 '담대한' 저출생 대책이 선순환할지 질문한다.

진보당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평등을 내건 공약에 젠더폭력 관련 공약을 수록했다. 이 장에는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대응,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과제가 있다. 여성폭력은 '안전'의제로 일컬어지기도 해왔다. 그러나 평등 없는 안전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시민을 '요보호 계층'으로 취급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공권력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과 안전은 상호보완해야 하므로, 함께 과제항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안되어 있는 법률제정 과제가 '평등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다. 평등과 안전이 어떤 관계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때, 기존 정책을 넘어선 사회적 제안과 새로운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라는 표현으로 '안전' 공약에 젠더폭력을 도시침수 예방, 기후위기, 범죄피해자보호, 교통사고 예방, 노동안전보건, 사이버 보안과 함께 기재했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최근의 요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젠더폭력의 경우 여러 위험 중의 하나로만 다루어질 뿐,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구하고 해소해나가고 교육할지 등 확장적으로 정책이 수록되고,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방식이다. '국민'이라는 표현은 이주민, 미등록 시민 등을 배제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지양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안전’ 공약에 젠더폭력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상세 내용을 보면 ‘흉악범 무관용’ 하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이 명시되어 있는 정책이 하나, 그 외 흉악범 관련 공약이 기재되어 있다. 안전을 카테고리화하는 정책 방향은 다른 당에서도 보이는 모습이지만, ‘흉악범’이라는 호명을 통해서 흉악범의 범위와 정도를 지정하거나 그에 대해 무관용하는 주체인 공권력을 내세우거나 암시하는 것은 국민의힘 공약이다. 안전은 안전해야 할 주체가 안전을 느껴야 한다는, 관점의 주변부화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도리어 안전/불안전, 흉악범/경미범을 나눌 수 있는 공권력을 강력하게 전제하는 정책은 권위주의적인 정책으로 반복될 수 있고, 이는 ‘안전감’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새로운미래와 국민의미래는 젠더폭력 관련 정책을 ‘포용’, ‘소외되는 이웃(없도록)’ 표현의 공약에 배치했다. 이 경우 사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모순을 짚고, 이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제시하기 보다 사람 중 일부 그룹에 대한 소외와 배제를 없도록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방향으로 문제인식과 대책마련의 적극성은 부재하기 쉽다.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존엄’, ‘안전사회 구현’ 등 범주가 넓은 추상적 가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국민의미래는 ‘피해자 보호’ 또는 기존의 피해자 보호 정책의 확대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0대 공약 과제 내 젠더폭력 대응이 아예 있지 않았다.

### 3. 각 당의 젠더폭력 방지 공약 검토

이 장에서는 각 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폭력 관련 공약의 내용을 추리고, 어떤 공약이 지향되어야 할지, 지양되어야 할지 구분해본다.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영역별 공약을 추가하거나, 전체 공약집에 더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거나, 당 지도부의 발언 등을 통해 수록된 공약 취지와 위배되는 발언을 하거나 하여 기본 자료에 기반한 아래 재정리보다 변경, 확대, 축소된 실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일러둔다.

### 〈표3. 각 당 10대 공약 중 ‘젠더폭력’ 관련 내용〉

<p>더불어민주당</p> <p>6. [환경, 사법윤리, 행정 자치, 노동, 여성] 국민 안전을 최우선 행 기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후략</li> <li>○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li> </ul> <p><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간죄의 구성요건을'폭행 또는 협박'에서'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행 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li> <li>○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li> </ul>
<p>국민의힘</p> <p>5.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p>	<p><input type="checkbox"/>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li> <li>○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li> </ul> <p><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p> <p>①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li> <li>-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li> <li>-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li> <li>-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li> </ul> <p>②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li> <li>-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li> <li>-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li> <li>- S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li> </ul> <p>③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li> <li>-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li> <li>-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li> </ul>
<p>녹색정의당</p> <p>5. [여성] 〈성평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 없이 성평등 사회</p>	<p><input type="checkbox"/>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li> </ul> <p><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li> <li><input type="checkbox"/>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li> <li><input type="checkbox"/>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 안전 사회 구축</li> <li>-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성적괴롭힘도 성폭력으로 포괄, 스토킹 교제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률 등 제·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 지침 재정비,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li> <li>-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li> <li>-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최저 주거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 홍보 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위기 상황시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li> <li><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모두의 기본권 보장</li> <li>-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취업 교육 지원 강화,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등</li> </ul>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8. [안전, 여성, 노동, 과학 기술정보통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이행방법</li> <li>②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방지법 개정</li> <li>○ 젠더 기반 폭력(권력에 의해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원스탑 시스템</li> <li>○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을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li> <li>○ 여성폭력방지법 개정</li> <li>○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법률 개정</li> <li>○ 혐오표현방지법 제정</li> <li>○ n번방 방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폭력 범죄 인식 교육의무화 및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 체계 개선</li> <li>-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li> </ul> </li> <li>○ 그루밍 성범죄(성인) 신설</li> <li>③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li> <li>○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li> <li>○ 생활동반자법 제정</li> <li>○ 성소수자 인권보장,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시행 강화, 민주유공자법, 노동허가제, 동물권·채식권 보장 등</li> </ul>
자유통일당	없음
새로운미래	<input type="checkbox"/> 목표

7. [보건복지/여성] 포용 복지·포용·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li> <li>○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li> <li>□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li> <li>⑤ 여성 권익 향상 및 안전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유지·강화</li> <li>-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li> <li>-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li> </ul> </li> </ul>
더불어민주연합	없음
조국혁신당 4.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li> <li>·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li> <li>·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li> </ul>
국민의미래 6. [보건복지/재정경제/사법윤리/안전/기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li> </ul> </li> <li>■ 이행방법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li> <li>-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li> <li>-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람e 서비스 개선</li> </ul> </li> </ul> </li> </ul>

발표자는 각 당이 특정 젠더폭력 공약을 제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O와 X로 확인하는 표를 별도로 재정리하지 않았다.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해도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 책임있게 해당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며,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타당하게 제기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함이 마땅하다. 22대 총선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총선이 마치고 국회가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공약화하지 못한 과제는 추가로 공약화하여 발표하고 약속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든 정당에 필요한 젠더폭력 방지 정책을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다.

논의해야 할 것 중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젠더폭력 관련 공약에 대해 현재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큰 변화가 될 공약, 현재 상황에서 작은 변화가 필요한 공약,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의 공약, 현재 상황에서 퇴행이 되는 공약으로 나누어보았다. 평가와 분류는 본 발표자가 토론을 위해 시도한 것이다. 공약에 대한 내용적

평가, 질적 비판은 22대 국회의 본격적 논의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적극적인 추진, 책임성 높은 입법과정에 연결되기를 바란다.

〈표4. 각당 ‘젠더폭력’ 관련 공약 내용과 성격에 따른 분류〉

선심성 공약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국민의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국민의힘
유지적 공약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국민의미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확대	국민의미래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	국민의미래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	새로운미래
작은 변화 공약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국민의힘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	국민의미래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조국혁신당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최저 주거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 흉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위기 상황시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녹색정의당
	디지털성폭력 범죄 인식 교육의무화 및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 체계 개선	진보당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진보당
큰 변화 공약	강간죄의 구성요건을'폭행 또는 협박'에서'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 개정	녹색정의당, 진보당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	녹색정의당, 진보당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더불어민주당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률 등 제·개정	녹색정의당, 진보당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	국민의힘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국민의힘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의힘
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	녹색정의당
젠더 기반 폭력(권력에 의해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원스탑 시스템	진보당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을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	진보당
혐오표현방지법 제정	진보당

위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국민의미래는 ‘유지적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소극적이고 좁은 범위의 공약인 셈이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상으로는 분량이 적고 문구가 추상적이었고, 해당 내용 역시 소극적 변화 또는 현실 유지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이어서 아쉽다. 상세 공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를 이끄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힘은 선심성 공약, 달리 표현하면 무책임할 수 있는 공약을 크게 제시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인데, 이는 ‘엄벌주의의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의 경우 흉악범죄인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가?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다움, 화간이데올로기, 강간통념 등에 가로막혀 불송치, 불기소 되고

있는 현실은 먼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톡킹과 가정폭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강압적 통제라는 폭력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사소화하는 통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관용, 무기형 등은 비현실적인 말 그대로 빌 공자의 공약‘空約’ 일 뿐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포함하는 인식개선, 통념의 해제가 아니라 공권력의 일방적인 권한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현행 유지적 공약, 작은 변화 공약, 큰 변화 공약은 모두 필요한 공약이다. 현행 유지적 공약은 지금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작은 변화 공약과 큰 변화 공약은 구분이 애매한 측면도 있다. 작은 변화로 판단되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큰 변화로 판단되지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너무 오래되고 강고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편견이지 않은가.

작은 변화공약, 큰 변화 공약, 현행 유지적 공약으로 발표자가 분류한 것은 각각의 정도로 변화 이행이 필요하며 추진이 필요하므로 각당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큰 변화 공약 중 예컨대 ‘형법 297조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 과제를 살펴보자면 이는 70년간 유지하고 있던 폭행 또는 협박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극심한 저항을 요구하고 있는 최협의설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한 입법부의 전환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미 62.5%의 강간 상담이 명시적 폭행과 협박 없는 사건이며, 한국 사법부는 강간죄 판단에서 폭행 협박의 좁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판례상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법원 행정처 등의 관계자는 반복되는 일부 우려사항을 강조하며 난감하다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한 당 차원의 역할분담, 우선순위 배치, 시기에 대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도 근본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전환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일부 가정폭력 범죄유형의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원천적인 변화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때 누더기와 같은 형태로, 일부 개정의 남발이 이루어지며, 이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탈각하는데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큰 변화 공약의 경우 22대 국회, 각 정당의 당 차

원에서의 힘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 4. 지금 필요한 젠더폭력 방지 책임

2022년 20대 대선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해 제안된 젠더정책 중 젠더폭력 관련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았다. (1)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2) 「성폭력 처벌법」, 온라인 성착취 구조 기획 운영자 처벌 및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처벌규정 마련 (3)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여성폭력으로 성매매·성착취 관점 정립 (4)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5)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관점 폐기 (6) 여성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시에 대한 사회적 관리감독 강화

이 중 2024년 22대 총선과제로 10개 당에서 제시한 공약 중 미처 다루지 않고 있는 과제들이 있다.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 위안부 특별법 마련, 여성혐오적 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서 각 당은 현장단체들의 현황 리포트를 숙지하고 연결된 과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위에 더해 소위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는 여성대상 혐오·증오범죄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대한 혐오 및 테러증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스토킹, 괴롭힘, 살해 문제, 젠더폭력에 대한 교육 다양화 및 보편적 보장은 그 현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특별한 대책과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예산이 삭감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에 대한 예산복원 및 증액, 일방적 통폐합과 구조조정 중단,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및 추진체계 실질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 협력 증진, 거버넌스 회복 및 강화도 필요한 과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무도한 일방적 움직임을 제재하고, 2025년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는 것 또한 22대 국회 시작시기부터의 긴급한 과제다.

-----

위 발표에서는 발표문 작성 일자 기준 ‘원내정당’ 1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젠더폭력 방지 관련한 공약을 제출한 정당중 위 분석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곳 중 세 곳의 공약 중 일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노동당의 경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을 수록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을 강조하여 · 모든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평등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및 임용후보자 대상 반성폭력교육 법정 의무교육화 · 초 · 중 · 고 · 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조용한 학살' 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는데, - 법제정을 통한 젠더적 관점의 국가책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여성 및 성소수자 전문 정신건강서비스센터 설치, 심리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을 기재하였다.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나 심리적 지원 내용은 공약으로 있으나 20대 여성에 대한 조용한 학살이라는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주목을 정책화한 것이다.

새진보연합의 경우 8. [정치·사법윤리] 8.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 3.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제도와 변호인 공동참여 기소제 도입에서 · 성범죄, 폭행, 가택침입,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함 ·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공소참여인으로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대공소제를 도입함을 제시하였다. 검찰의 독점기소권을 극복하고, 성폭력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와 위치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 등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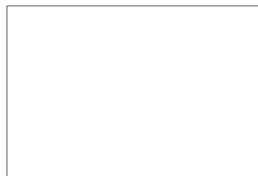
여성의당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였고, 공공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성폭력이나 성폭력 2차 가해 이력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유튜브, 성착취 산업 등 활성화되어 있는 일상적 성산업에 대한 제재를 공약화하였다.

# MEMO

# MEMO

# MEMO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 홈페이지 : <https://2024upper.campaignus.me/>